

 POSRI 보고서

# 미얀마 사업여건과 정치리스크에 대한 한국기업 대응

조대현 수석연구원, 글로벌연구센터 (chodh@posri.re.kr)

## [목 차]

1. 미얀마의 변화
2. 최근 외국인 투자의 특징  
[참고] 한국의 진출 현황
3. 사업여건 및 잠재적 리스크
4. 한국에의 시사점

## Executive Summary

- 미얀마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완화에 힘입어 투자유치 제도를 마련하고, 아세안경제통합이 임박('15 목표)해지면서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급증
  - EU의 경제제재 완전 해제('13.4), 미국의 투자 및 수출입 관련 제재 완화에 이어 WB 25억 달러, ADB 8억 달러 등 대규모 자금지원도 쇄도
  - '12년 이후 신외국인투자법('12), 관리변동환율제('13), 경제특구법('14)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핵심 제도 마련
  - 최근에는 중국 이외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가 투자 주도 (투자의 70% 이상)
  - 기존 자원개발 이외 봉제업 등 제조업과 통신, 인프라, 부동산 투자 급증
- 한국은 22억 달러(누적 실투자액, ~'14.6) 투자. 포스코 산하 대우E&P 가스전 투자가 대표적 사업으로 광업부문이 금액기준 80% 이상 점유
  - 포스코는 한국 최대 투자기업으로 '90년대부터 진출, 철강과 가스전 사업 이외에도 광물탐사, 중장비, 호텔법인, 무역법인 운영 중. 특히 철강사업, 가스전 사업, 호텔사업 등이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 받고 있음
  - 최근 봉제기업 진출 급증(140여개, '15.3). 한국정부도 '17년까지 5억 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과 연 3천만 달러의 무상원조 계획 등 적극 지원 추진 중
- 반면 급속한 개혁개방으로 사업실행 여건은 아직 열악. 특히 올해말 총선과 내년초 대선을 앞두고 헌법개정 등 정치공방으로 정치 리스크 확대
  - 동남아 역내에서 인건비는 가장 싼 반면 최고 임대료, 전력·물류 등 열악한 인프라로 사업여건은 전세계 최하위권(177위/189국)
  - 대통령 후보자격이 헌법개정안의 핵심 쟁점이나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. 또한 여당 집권시 경제제재 지속, 야당 집권시 군부 강경파 반발 등 여야 어느 쪽이 집권하든 정치적 혼란 가능성 높음
- 한국기업과 정부는 미얀마 여건을 고려한 '맞춤형 전략' 추진 필요
  - Soft 전략 강화 및 현지 관행 이해 필수: ▶인허가 지연, 원자재 확보, 직원 관리 등은 현지 파트너사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결, ▶한국정부 유무상 자금 지원과 WB, ADB, IMF 등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제안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, ▶ 토지가격 협상, 제한된 과실송금 등 현지 관행 이해 필요
  -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응, 투자실행 시기 조정: ▶장기투자, 대규모 프로젝트 실행(특히 자금집행)은 내년 이후로 조정, ▶ 신속 추진 필요시 상반기 이내 비준확보, ▶합리성도 중요하나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방안 사전 마련
  - 범정부 차원에서 한국기업 전용공단 추진 제언: ▶양곤에 전력, 토지, 물류 문제 해결가능한 전용공단 추진 제언 (中·日·印·泰도 국가차원 조성중), ▶정부 지원 하에 한국기업 중심 공단 조성시 고성과 창출 가능 전망

## 1. 미얀마의 변화

### □ 지속적 개혁개방 통해 경제제재 완화 성과

- EU, 무기수출 이외 경제제재 완전 해제 ('13.4)
  - 일반특혜관세제도 (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; GSP) 자격 부여
- 미국, 제재완화 기조 하에서 영향력 행사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
  - 투자, 수출입 제재 대부분 완화 (법률 폐기 대신 유예조치 통해 추진 중)
  - 특별지정대상 (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: SDN) 리스트의 기관 또는 개인과 미국 국적 기업, 개인의 접촉 및 거래 금지 지속
- WB, IMF, ADB 등 지원 재개 ('11. 8 ~)
  - 정책 컨설팅과 대규모 자금지원 (WB 25억 달러, ADB 8억 달러 등)

### □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위한 제도 개선

- 신외국인투자법 ('12.11)과 관리변동환율제 ('13.4) 도입이 대표적 사례
  - 신외국인투자법은 24년 만에 개정, 세금감면 및 인센티브 강화
    - 단독투자, 합작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 가능
    - 법인세 면제기간 최소 5년 및 각종 세금감면 혜택 확대
    - 토지사용 최장 70년간 허용, 이익송금 보장 등
  - 관리변동환율제 도입 통해 기존 공식환율, 정부공인환율, 외국환태환권 (Foreign Exchange Certificate; FEC, 달러 대신 사용하던 화폐) 환율, 시장 환율 혼용 체계에서 시장환율로 단일화
- 경제특구 (Special Economic Zone; SEZ) 제도 개정 ('14.1)
  - '11년 제정한 경제특구법이 '12년 개정된 외국인투자법 대비 혜택이 적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

<경제특구법 주요 개정 내용>

| 항목    | 기존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임대기간  | 최대 60년(기본 30년+추가 15년씩 2회) | 최대 75년(기본 50년+추가 25년 연장)<br>*외투법: 최대 70년 (50년 + 10년씩 2회) |
| 토지양도  | 임대토지의 제 3자 양도불가           | 허가 후 임대, 사용허가, 판매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소득세   | 5년간 면제 후 5년 50% 감면        | 5~8년 면제후 5년-5년 면제/감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상업세 등 | 정해진 기간동안 상업세 면제/감면        | 기간 무관, 형태에 따라 면제/감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내수판매  | 불허(내수판매시 허가 및 세금납부 필수)    | 진흥지역(Promotion Zone)으로 별도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자료: 인터넷 검색 등 저자 정리

## 2. 최근 외국인 투자의 특징

### □ 미얀마 보유자원, 경제개혁 니즈 등을 감안 시 자원개발, 인프라, 부동산, 경공업 부문 유망 전망

- 자원개발: 중국, 인도, 태국 등이 오일/가스, 광업 분야 투자 진행 중
- 인프라 및 플랜트: 전력분야에서 심해항구, 도로, 철도 투자 증가 전망
- 부동산 개발: 양곤, 만달레이, 네피도의 업무시설, 호텔, 주거시설 부족
- 경공업: EU의 GSP 부여, 미국의 미얀마산 수입허가로 노동집약적 CMP (Cutting, Manufacturing, Packaging) 산업 투자 지속 증가 전망
  - 중화학공업 등 대규모 제조업 투자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

### □ 최근 외국인 투자 양상에 변화 조짐

- 자원중심 투자에서 제조업, 수송/통신 등으로 투자분야 확대
  - 선진국향 수출입 제재 완화 이후 봉제업 등 CMP 분야 제조업 투자 급증
  - 신규 사업자 선정 따른 통신 분야 및 부동산개발, 호텔/관광 투자 증가세
- 최근 2년간의 투자는 아세안경제통합('15 목표)을 대비하여 싱가포르, 태국, 말련 등 아세안 주도 (70% 이상 점유)
  - 아세안 국가들은 호텔, 레지던스, 쇼핑몰 등 상업·거주용 건설분야 투자 확대. 특히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본부를 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규모 급증
  - 기존 투자를 주도했던 중국은 짜옥퍽-쿤밍간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완공으로 신규투자 감소

<주요 산업 및 국가별 투자동향>

(단위: USD 백만)

| 산업    | '89~'12 | '13~'14 | 국가   | '89~'12 | '13~'14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전력    | 19,068  | 257     | 중국   | 14,168  | 326     |
| 석유/가스 | 14,182  | 2,811   | 태국   | 9,568   | 687     |
| 광업    | 2,830   | 39      | 홍콩   | 6,374   | 581     |
| 제조업   | 1,911   | 3,247   | 한국   | 2,977   | 234     |
| 호텔/관광 | 1,365   | 793     | 싱가포르 | 1,858   | 6,477   |
| 부동산개발 | 1,056   | 1,064   | 말련   | 1,031   | 623     |
| 수송/통신 | 314     | 2,720   | 베트남  | 350     | 339     |

자료: 인가 기준, 미얀마 국가계획경제개발부 투자기업관리국 (2015)

## [참고] 한국의 진출 현황

### • 미얀마 투자 동향

- 투자 신고 누적액 47.6억 달러, 실투자액 21.5억 달러 ('68~'14.6)
- 법인수 기준: 제조업(주로 봉제업) 및 도소매업 투자가 전체 70%
- 금액 기준: 포스코 산하 대우 E&P의 가스전 투자 (27억 달러)가 포함된 광업이 전체 80% 이상 점유

<주요 업종 투자통계> (단위: 건, 사, 억 USD)

|     | 신고건수 | 신규법인수 | 신고금액 | 투자금액 |
|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|
| 광업  | 12   | 7     | 36.5 | 16.8 |
| 운수업 | 13   | 9     | 6.9  | 2.7  |
| 제조업 | 181  | 75    | 3.0  | 1.6  |
| 전체  | 335  | 161   | 47.6 | 21.5 |

자료: 한국수출입은행 (2014. 11)

### • 포스코 및 계열사 진출 현황

- 한국 최대 투자기업으로 '90년대 후반부터 진출. 철강법인, 가스전사업 법인, 광물탐사법인, 중장비법인, 호텔법인 및 무역법인 운영 중
- 오랜 진출 역사에 따른 사업 경험, 현지의 높은 Reputation 및 네트워크 활용하여 新 비즈니스 모델 지속 개발 중
- 현재 농업, 건설, 발전, 에너지, 인프라 분야에서 추가로 사업 검토/추진 중
- 가스전 사업, 철강사업, 호텔사업 등이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

<포스코 및 계열사 진출 현황> (2014 기준)

|     | MPSC<br>(철강) | MDI<br>(무역)* | MDCM<br>(중장비) | DWA<br>(호텔) | DPR<br>(광물) | E&P<br>(가스) | MPCC<br>(철강)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설립일 | '97.11       | '13.1        | '97.1         | '13.8       | '14.2       | '04.5       | '13.10       |

\* 구 무역법인 (MDL)은 '95년 12월 설립, 현재 MDI에서 업무 추진

### • 무상원조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(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; EDCF) 지원 동향 및 계획

- KOICA 무상원조: 농촌, 지역개발, 인적자원개발, 공공행정, 인프라, 환경 분야 등을 대상으로 총 6,610만 달러 지원 ('91~'14)
  - 최근 연 1,000만 달러 이상에서 향후 연 3,000만 달러 수준으로 확대
- 대외경제협력기금: '92년 전화통신망 확충사업을 시작으로 '14년까지 8개 사업, 2.4억 달러 지원
  - 한국 전체 승인액의 2.3% 차지, 전체 51개 수원국 중 11위
  - 2017년까지 5억 달러 지원계획 (농촌개발 사업, 송전망 사업 등)

### 3. 사업여건 및 잠재적 리스크

#### □ 급속한 개혁개방 불구 현재 사업여건은 열악한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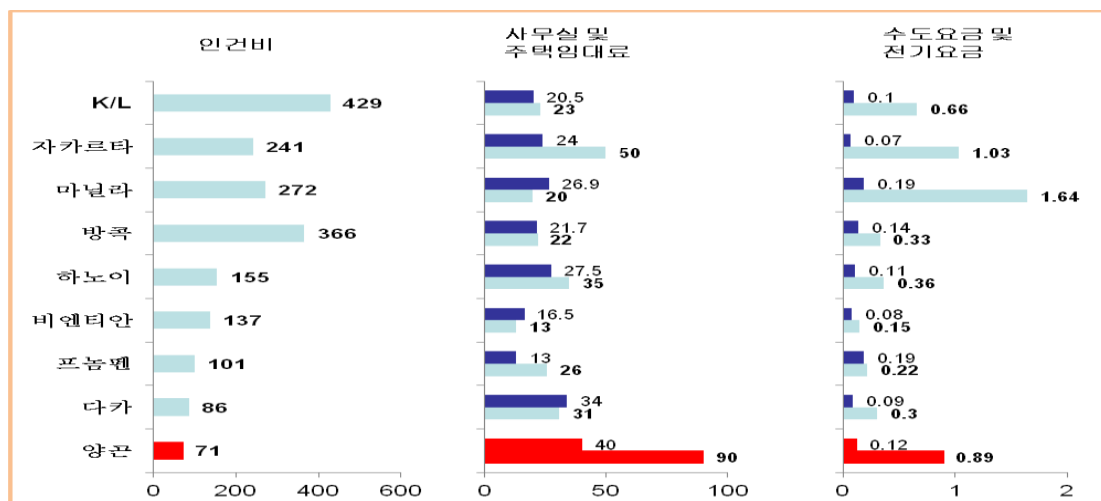
##### ○ 주요 제도 마련 반면 단기간 내 압축 추진으로 실행 한계

- 신정부 출범 이후 민간은행 외국환거래 허용, 수출입 사전허가제 폐지, 외국환태환권(FEC) 제도 폐지 등 경제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조치 실시 반면 세부 지침 미비로 실제 실행 한계
- 최종 결정까지 다수의 절차와 단계로 시간적, 경제적 손실 불가피
  - 투자승인 건별로 인허가 주체가 다르며, 개별협상으로 해결해야 함
  - 사소한 인허가 사항도 상급자 또는 상급기관까지 결재를 받아야 함
  -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비용 (불필요한 투자 요구, 변호사 비용 등) 발생
- 현장에선 변경된 제도에 업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

##### ○ 낮은 임금 대비 높은 부동산 임대료 및 공공요금

- 양곤 인건비는 동남아 최저 수준인 반면, 글로벌 기업의 대거 진출로 사무실 및 주택 임대료 등 부동산 가격은 동남아 최고 수준 (아래 그림 참조)
  - 미얀마 임금수준은 베트남의 50% 수준인 반면, 노동생산성은 80% 수준으로 임금 대비 노동생산성은 베트남의 1.6배 추정
  - 최근 최저임금법 제정으로 저임 메리트 일부 상실 가능성
- 반면 양곤 등은 외부인력 유입 제한으로 단기 내 인력확보 어려운 상황
-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은 높은 수준 (각각 동남아 4위, 3위)

<임금, 임대료, 공공요금 비교>



인건비: 월평균임금(USD), 사무실임대료: USD/1m², 주재원 주택임대료: 평균월세, USD, 수도요금: USD/1m³, 전기요금: USD /1kWh

자료: Kotra, 2014

## ○ 산업기반 부재 및 열악한 인프라 환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

- 산업기반 부재로 원자재와 설비 대부분 수입 의존
- 만성적인 전력 부족으로 양곤에서도 단전 발생
  - 전력생산량 9,711백만kwh로 한국의 2% 수준. 또한 전력 손실률 26%
  - 수력발전 중심으로 건기에 수시 단전(자가발전 따른 추가 비용 발생)
- 물류 경쟁력 최하위: 물류성과지수(LPI) 160개국 중 145위 ('14, WB)
  - 고속도로망 미비(양곤-만달레이 400마일 구간 이외에 고속도로 부재, 또한 고속도로 내 대형트럭 운행 제한), 철도망 노후화 등
  - 심해항구 부재: 양곤항 2.5만톤급 이상 선박 입항 불가

<동남아 주요국 물류성과지수 순위 (2014)>

|            | 종합<br>순위   | 통관<br>효율성  | 인프라<br>수준  | 운송비<br>책정  | 서비스<br>역량  | 화물<br>추적   | 인도<br>적시성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베트남        | 48         | 61         | 44         | 42         | 49         | 48         | 56         |
| 인니         | 53         | 55         | 56         | 74         | 41         | 58         | 50         |
| 캄보디아       | 83         | 71         | 79         | 78         | 89         | 71         | 129        |
| 라오스        | 131        | 100        | 128        | 120        | 129        | 146        | 137        |
| <b>미얀마</b> | <b>145</b> | <b>150</b> | <b>137</b> | <b>151</b> | <b>156</b> | <b>130</b> | <b>117</b> |

자료: 세계은행, 물류성과지수 (2014)

## ○ 종합적으로 비즈니스 환경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수준

- 조사대상 189개국 중에서 177위 (Doing Business 2015, WB)
  - 말련 18위, 베트남 99위, 인니 114위, 캄보디아 135위, 라오스 148위

<동남아 주요국 순위 및 미얀마 항목별 순위>



자료: 세계은행, Doing Business 2015 (2014)

## □ 정치부문 리스크 확대 : 대선 전후로 헌법개정과 집권구도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 가능성

### ○ 헌법개정은 미얀마 개혁개방의 지속적 성공의 갈림길로 평가

- 헌법개정 없이는 사실상 정권교체 불가능한 관계로 국제사회도 예의주시
- 총선은 '15년 11월 예상, 대선은 총선 3개월후 간선제로 추진

### ○ 헌법개정의 핵심쟁점은 대통령 후보자격(59조)과 헌법개정 요건(436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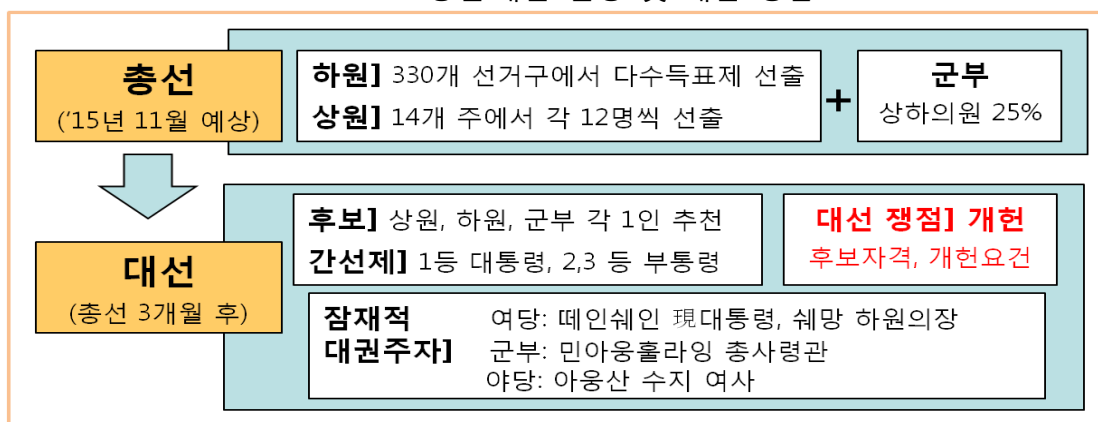
- 대통령 후보자격(59조): 군사지식 보유 및 후보자 직계가족의 미얀마 시민권 보유 → 영국인 배우자 및 자녀를 둔 수지 여사 출마 불가
- 헌법 개정요건(436조): 상하원합동의회 75% 이상 찬성, 국민투표 요구 → 군부의 합의\* 없이 사실상 개헌 불가

\* 군최고사령관이 상하원 의원의 25%, 내무부·국방부·국정부 등 3개 핵심부처 장관 지명권 및 대통령 후보 추천권 부여 (141조)

### ○ 헌법개정 '13년 7월부터 공식적 논의 반면 현재까지 미타결 ('15.3E) → 총선전 개헌이 안될 경우 총선 결과에 따라 변화 가능성

- 헌법개정검토위원회 발족 ('13.7) → 6자회담\* 개최 권고 ('14.10, 국회)
- \* 대통령, 군사령관, 상원의장, 하원의장, 수지여사, 소수민족 대표
- 군부는 총선전 개헌 반대, 여당(USDP)은 총선후 검토 가능 시사
- 야당(NLD) 및 수지여사는 총선전 개헌이 가장 바람직하나, 불가능할 경우 총선 승리후 개헌 및 재선거도 고려 판단

#### <총선·대선 일정 및 대선 쟁점>



### ○ 여야 누가 집권하든 리스크 상존

- 여당 집권시 야당의 반발과 국제사회 비난 및 미국 경제제재 지속 전망
- 여당은 추가 정치개혁 추진 통한 정치 안정화 우선 전망

- 야당 집권시 군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반발 가능성
- 기존 정치경제 부문의 기득권을 보유한 군부와의 절충이 관건

## □ 사회적 리스크 확대 : 국경지역 반정부 세력과의 갈등 지속 및 대학생과 노동자 시위 발생

- 산주 북부 중국 국경 인근 코캉지역에서 정부군과 반군간 교전 격화로 비상사태 및 계엄령 선포 ('15.2.17)
  - 양측간 교전으로 정부군(경찰) 61명, 반군 72명 사망. 현지 피난민 4만명은 중국 국경을 넘어 피신 중
  - 정부와 반군 대표간 평화협정 최근 체결('15.3.31) 불구, 코캉지역 교전은 지속 중이며, 산주의 일부 반군들은 협정에 반대하는 상황
- 물가상승, 근로자들의 권리의식 강화 및 연말 총선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커지고 있음
  - 특히 현지 한국계 봉제기업은 140여 개, 고용인력은 10만여 명에 이르는 상황으로 임금인상 요구하는 파업 확산 시 Cost 상승 불가피
- 교육법 개정 반대하는 학생시위 발생. 일부에서는 1988년의 민주화 시위 이후 야당 이외 최초의 저항운동으로 평가

## 4. 한국 기업 및 정부 시사점

### □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한 '맞춤형 전략' 추진

- 한국정부의 유무상 지원자금 및 WB, IMF, ADB 등의 자금지원 프로젝트 참여 (인프라 투자 등)
  - 한국정부, '17년까지 5억 달러 EDCF 제공 및 무상원조를 연 3천만 달러로 확대 계획. 또한 WB, ADB도 향후 각 25억 달러, 8억 달러 지원 계획
  - 향후 정치적 불안정 가능성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에 대한 지원활동 증가가 예상되며, 이들 자금의 특성상 기결정 사항의 재변경은 어려움
  - ▶ 선제적으로 제안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추진, ▶ 한국정부 자금지원시 설비공사 주체를 한국기업 또는 한국산 중간재 (소재 등) 사용 연계, ▶ WB 등 국제금융기관 자금 활용한 투자 리스크 완화 모색
- 파트너사 또는 현지 네트워크 활용
  - 인허가 지연, 원자재 확보, 직원관리,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현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 수단으로 이용
  - 법에 의존한 문제해결은 시간과 비용 과다. 비합리적 결정 가능성 상존
- 토지가격 협상, 제한된 과실송금 등 현지 관행에 대한 이해 필요
  - 정부에서 정한 공단 내 토지 가격도 협상에 의하여 인하 가능

- 본국으로의 과실송금은 현지 법에서 요구하는 세금 납부 등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경우 등에만 정부의 승인획득 가능

○ 한류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 창출 (프랜차이즈 사업 등)

-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은 미얀마인에게 싱가포르에 이어 ‘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’ 2위에 선정 (‘14)
- (롯데리아 3대 성공요인) 현지 최적의 사업 파트너, 현지인의 기호에 신속히 대응, 그리고 한류를 활용한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이 성공요인

□ 총선·대선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응, 투자 실행 시기 조정

○ 장기 투자, 대규모 프로젝트의 실행(특히 자금유입)은 내년 이후로 조정

- 선거 결과가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어려운 경우, 전국적인 대규모 소요 또는 군부 강경파에 의한 계엄령 등 발생 가능성
- 본격적인 투자시기는 내년 이후로 연기, 시장조사 위주의 전략도 바람직
  - 일본, 미국 등의 주요기업은 투자시기를 내년 이후로 조정하고 관망세 유지

○ 신속한 추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반기 이내에 조기 확정 필요

- 하반기 이후 정부의 의사결정 및 행정절차 지연, 선거 이후에도 일부 행정 공백 우려

○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방안 사전 마련

- 합리성과 경제성에 기반한 전략 체계도 중요하나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 가능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

□ 범정부 차원에서 한국기업 전용공단 추진 필요

○ 중국, 일본, 인도, 태국 등은 국가적 차원에서 자국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마련을 위하여 경제특구 조성 중

- 중국-짜오후, 일본-필라와, 인도-시트웨, 태국-다웨이 경제특구 개발 중

○ 경제가 발전한 양곤을 중심으로 전력, 토지, 물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용공단 추진 제언

- 현재 일본이 필라와 지역에서 추진 중이나, 추가 개발 가능 지역 존재
- 특히 필라와 지역은 경제특구법에 의하여 최대의 혜택 확보가 가능한 지역
-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하에 한국기업이 직접 경제특구 조성사업에 착수하고, 한국기업 중심으로 입주할 경우 높은 성과 창출 가능

## [참고자료]

### [보고서]

Kotra, "2014 투자유망국 비교포럼" 2014.12.11

Kotra, "대 미얀마 외국인투자 동향" 2014.12.4

국제무역연구원, "전환기의 미얀마, 발전현황 및 진출여건 점검" 2014.9

한국무역협회, "미얀마 외국인 투자동향" 2015.3

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, "아세안 신흥국내 기업경영 애로사항과 기회요인" 2014.4.23

### [홈페이지]

IMF ([www.imf.org](http://www.imf.org))

World Bank ([www.worldbank.org](http://www.worldbank.org))

미얀마 중앙통계청

### [언론]

Irrawaddy "A New Generation Takes to the Streets in Burma", 2015.3.5

Irrawaddy "Thousands of Garment Workers Strike in Rangoon", 2015.2.20

문화일보, "닭은꼴의 나라, 미얀마", 2014.7.23